

오늘의 주요기사

2023 1 10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강원도민일보	15	[] ()		1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2023		2
LG		[] ,	![1/3...	3
LG		[] ,	![2/3...	4
LG		[] ,	![3/3...	5
江原日報		[] , 2023		6
江原日報		[] .		7
江原日報		[] , 2023		8
BBSNEWS		-	[1/2]	9
BBSNEWS		-	[2/2]	10
강원도민일보	02			11
 tjineews .co.kr			...	12
 tjineews .co.kr			...	13
강원도민일보	01	, 1		14
江原日報	01	.		15
강원도민일보	04	가		16
江原日報	10	‘ ’		16
강원도민일보	12	.		17
강원도민일보	11	‘ 3 ’		17
江原日報	02	‘ ’		18
강원도민일보	19	[] ‘ ’		19
江原日報	19	[] ‘ ’		20

강원도민일보

2023 01 10 ()
15



이기찬(양
구) 도의
회 부의장
은 10일 오
후 3시 40

분양구군해안면복지
회관에서 열리는 해안
면 신년주민설명회에
참석한다.

2023년 재경양구군민회 신년회 및 군민회장 취임식

(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양구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김성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2023년 재경양구군민회 신년회 및 군민회장 취임식이 6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올림픽아홀 1층)에서 재경양구군민회(회장 강길선) 주최로 한기호 국회의원, 서흥원 양구군수, 박귀남 군의장과 의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재경양구군민회원, 초청인사 등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서흥원 양구군수는 장계용(재경양구군민회 감사), 이대연(부천사무국장), 김건호(前사무총장)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제1호 강길선(재경 양구군민회장), 제2호 한인철(재경 양구군민회 부회장), 제3호 장계용(재경 양구군민회 감사) 각 100만원의 기부금을 서흥원 양구군수에게 전달했으며, 답례품으로 방짜수저 세트를 전했다.

강길선 제20대 재경 양구군민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군민회가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상호간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향의 기관, 단체, 고향민과의 유대강화와 협력을 통해 고향의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흥원 양구군수는 2027년에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양구에서 용산까지 60여분이 걸리는데 정주 여건 등을 잘 준비하겠으며, 민선 8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양구, 군민중심 행복양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G

[헬로이슈토크] 소양강댐 사용권, 강원도에 돌려달라!

구분사회(백은규 기자)

<소양강댐 사용권, 강원도에 돌려달라!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전소연 기자

Q. 인사말씀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Q. 소양강댐 준공 목적 및 현 상황

73년 10월 완공, 동양 최대 다목적댐

수몰지역 발생 등 주민피해

관광지 역할했지만 지역에 미친 손해 더 커

수도권 수자원 확보, 홍수 조절·전력 생산

건설 당시, 정부 예산 5분의1 투입

Q. '소양댐 사용권 찾아오자'고 발언했는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 사용권설정 예정자가 산출 금액 부담

댐 건설비 288억 중 233억 한수원 부담

현 물가 환산 2조8천억 원

한수원, 50년 간 사용료·발전매출금 등 챙겨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 감내

Q. 소양댐 건설로 얻은 수도권의 이익은?

수도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홍수조절

수도권 물 40% 소양강댐에서 나와

소양댐 없었다면 서울 강남 발전 불가능

소양댐 없이는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

Q. 이에 반해 강원도민이 겪은 고통은?

50km² 면적 수몰

LG

2만여 명 실향민, 보상 못 받고 마을 떠나
소양댐 주변 230km² 자연환경보전지역
춘천·양구·인제... 높은 규제
안개 및 서리일수 2배↑호흡기 질환↑
농작물 피해·농업소득 감소 등
50년 간 피해, 10조 1500억 원 달해

Q. 한수원은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소양댐 발전 수입, 연간 약 1444억 원
용수판매 수익, 연간 442억 원 추정
강원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도요금 납부
전기·용수...50년 간 수입 9조 4330억 원

Q. 지역 사회 환원은?
피해지역에 60억 원 지원, 수입액 3% 불과

Q. 소양댐이 강원도에 돌아오기 위한 과정?
정부와의 협의, 관련 법령개정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리권 요구 필요

Q. 소양댐 사용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지역 주민들 50년 간 희생 감내
초과수익, 피해 주민에 귀속돼야
특별자치도와 함께 소양댐 사용권 돌아와야

Q. 타 지역과의 공조
강원 및 충북, 댐 관리법 5조1항 개정 요구
댐 관리,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 협의로...
사용권을 넘겨달라는 주장과는 차이 있어

Q. 한수원의 지역환원을 높이는 방법은?
댐 관리에 지자체 참여 보장해야
초과 수익은 당연히 시군에 돌려줘야

LG

Q. 한수원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어

국내 12개 댐 요구 맞춰 중앙정부 결정해야

Q. 소양댐 사용권 문제, 공론화 계획은?

양구·인제·화천·춘천 4개 시군 공동대책위 구성

피해 주민 의견 수렴

관계 부처 방문 및 발전적 방향 모색

Q.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으로 관심 사안?

강원도, 산림 81%

소방헬기 조기 구매...초기 진화 적극 대응

도민 안전·재산 보호 중점

Q. 특별자치도 출범 맞물려 필요한 규제 완화?

국방개혁 수정에 맞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절대 농지 선별적 해제 필요

Q. 앞으로의 계획

특별자치도 위한 차별적 정책수립

소양댐 피해 지역 공동대책위 구성

댐으로 인한 초과수익 지자체 귀속 관철

Q. 소방헬기 도입, 구체적 계획은?

강원 소방헬기, 전부 임차로 운용

중장기적으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임차 헬기, 노후 기종 대부분

도가 보유할 경우, 화재 현장 즉시 투입 가능

2023 01 09 ()

江原日報

[포토뉴스]국민의힘 평창군 당원협의회, 2023 신년교례회



국민의 힘 평창군 당원협의회 2023 신년교례회가 8일 평창군용평면민속공연장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회장,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이범연 도보건의체육특보, 김성기.남진삼.이창열.박춘희 군의원을 비롯해 지역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하나된 평창!행복한 군민 의 담대한 미래비전을 통해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의 각오를 다졌다.

2023 01 09 ()

江原日報

[포토뉴스]평창 대관령청년회의소 회장 이.취 임식



제41대 대관령청년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이 8일 대관령면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송진호 회장이 이임하고 이규태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유상범 국회의원,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최종수 강원도의원, 이창열 남진삼 김광성 평창군의원 등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JCI회원과 가족 150여 명이 참석했다.

江原日報

2023 01 09 ()

[포토뉴스] 평창읍번영회, 2023 신년인사회 개최



평창읍번영회(회장:허준대)는 9일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지광천 도의원, 박춘희 이창열 군의원과 사회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읍 2023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BBSNEWS

춘천불교사암연합회장 이취임 - 신년하례법회 봉행

이석종 기자



춘천불교사암연합회장 이취임 법회와 신년하례법회가 9일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신임 회장 밀본스님과 전임 회장 법선스님, 수석부회장 월중스님, 부회장 혜욱스님, 동운스님, 초심호계위원장 도신스님, 수덕사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 등과 김윤호 연합신도회장, 불자 등이 참석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허영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회의 의장,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등 내외빈 300 여명이 함께해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 앵커 >

춘천불교사암연합회는 오늘(9일) 회장 이취임 법회와 계묘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차별과 소외받지 않도록 자비를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불교방송 이석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01 09 ()

BBSNEWS

< 리포터 >

춘천불교사암연합회와 연합신도회는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 내빈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회장이 취임법회와 함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신임 회장 밀본스님과 전임 회장 법선스님, 수석부회장 월중스님, 부회장 혜욱스님, 동운스님, 초심호계위원장 도신스님, 수덕사 중앙총회의원 정범스님 등과 김윤호 연합신도회장, 불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허영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회의의 의장,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등 내외빈 300 여명이 함께해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제 18대 춘천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은 밀본스님은 지역 불교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위기와 재난 재해 극복 등 시민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밀본스님(춘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 “춘천불교사암연합회는 앞으로 우리 춘천 지역 사회에 약하고 어렵다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분들이 없도록 대 자비를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실천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내빈들도 춘천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 불자들과 함께 시민과 도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지역 사회를 일궈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앞으로 춘천불교사암연합회를 약자와 차별받는 자가 없도록 하는 참다운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참다운 공동체입니다.”

육동한(춘천시장)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올 한 해 춘천, 또 춘천을 넘어서 강원도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서 작은 극락을 춘천과 강원도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스님들 모시고서 다하겠습니다.”

춘천불교사암연합회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통 문화 행사, 봉축행사, 이웃을 향한 자비 나눔 실천 등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이석종 기자 chbbs1001@daum.net

강원도민일보

2023 01 10 ()
02

지역별 답례품 인기 지방소멸위기 극복 일조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강원도민회 중앙회-강원도-강원도민일보

연예계·정치권 등 기부 동참
특별자치도 규제 완화 기대



최수임 임미선 이상훈 이상아

고향사랑기부제도입 1주일

째를 맞은 가운데 강원도민회 중앙회와 강원도, 강원도민일보가 전국 최초로 전개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에 각계의 동참이 이어지며 범국민 캠페인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강릉 출신 배우 최수임

강릉 출신 배우 최수임이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에 참여, 강원도 본청 고향사랑 기부제 연예인 1호가 됐다. 강원도는 최수임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최수임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강원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수임은 강릉시청이채희국장의 딸이다. 최수임은 2011년 영화 '써니'를 시작으로 배우활동을 시작해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드라마 '마인', '글리치', '트러블' 등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임미선 도의원

임미선(비례) 도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에 동참,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임 의원은 9일 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에 참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고향인 인제군을 비롯해 철원·화천·양구·고성 등 접경지역에 각각 10만원씩 모두 50만원을 기부했다. 임 의원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한 각종 규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획기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기부에 동참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성공 안착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시 거주 이상훈 씨

정선출신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상훈 씨는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에 동참, 정선군에 10만원을 기부했다. 정선출신인 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선군청에서 근무 후, 현재 세종시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이 씨는 "고향 정선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향을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취지를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거주 이상아 씨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이상아(35)씨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비록 고향이 강원도는 아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삼척 맹방딸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 참여하게 됐다"며 "세금공제와 더불어 기부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작가로 활동하면서 각 지역별 스토리를 수집하고 있던 차에 기부제 시행을 접하게 됐고, 답례품인 삼척 맹방 딸기의 맛이 너무 좋아 앞으로 여유가 있을 때 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했다.

유주현·구정민·정승환

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 지역대장 합동 이·취임식 행사 개최

태서, 황지, 장성여성, 장성, 상장, 철암, 철암여성 등 7개대

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대장 심우섭)는 지난 7일 오후 한마음신협 3층에서 지역대장 합동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윤 태백시 부시장, 고재창 태백시의회의장, 문관현 도의원, 홍지영 정연태 김재욱 심창보 시의원, 김재찬 태백시자원봉사센터소장, 심은숙 총무과장, 최승주 강원도자율방범연합대장과 주낙규 방범자문회장을 비롯한 심우섭 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장과 지역대장 및 대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시정발전과 지역 방범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취임 대장들에게 계급장과 임명장이 수여됐다. 2부에서는 김진관 상장대장의 대표 이임사, 송경자 장성여성대장의 대표 취임사와 내빈 축사 및 격려사 그리고 만찬이 이어졌다.

강원도연합회장상에는 김경묵 장성대장, 김진관 상장대장, 시장상에 김윤애 장성여성대장, 권윤희 철암여성대장, 지원선 황지대장, 시의장상에 강만호 철암대장, 권오욱 태서대장 등이 수상했다. 또한 지준식 전 자문회장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편, 2023년도 태백시자율방범 지역대장으로는 태서대 천재영 대장, 황지대 노영호 대장, 장성여성대 송경자 대장, 장성대 김상운 대장, 상장대 이기수 대장, 철암대 정문교 대장, 철암여성대 김분녀 대장이 각각 취임했다.

심우섭 연합대장은 “이임하시는 대장님들께서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저희 대원들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며, 태백시와 태백시방범대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취임 대장님들은 전임 대장님들이 닦아 놓은 토대위에 태백시 발전과 태백시자율방범대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크게 기여해 달라”고 전했다.

김정윤 태백시 부시장은 “지역의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봉사하고, 안전한 태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사진제공=태백시자율방범연합대)





오형상 기자(tbnews21@naver.com)

2023 01 10 ()
01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원팀으로 1등 분권 모델 완성

본지-도민회중앙회 비전선포식
출범 준비상황·청사진 제시
"강원 큰 도약 기회 큰 자긍심"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300만 강원도민·강원도지방정부·도정치권이 '원팀'으로 하나가 되어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대한민국 1등 자치분권 모델 완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도민회중앙회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비전 선포식'과 '강원공직자 원팀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과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지사, 한기호·이철규·이양수·송기현·노용호 국회의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대통령실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김대남 시민사회비서관, 차순오 국무총리실 정부실장, 오대산 월정사 선덕(원로) 원형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강원도민회중앙회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비전선포식'이 9일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한기호·이철규·이양수·송기현·노용호 국회의원, 관련기관관계자, 강원도민회 임원, 출향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특별자치도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정호

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김상영 도자치법령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상황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강원도 미래인재인 이하은(원주·민사고3년) 학생·안상화(춘천·서울대대학원 경제학 전공) 학생, 강원학사 재학생인 윤재영(원주·송실대글로벌미디어 3년)·변가영(원주·국민대

바이오발효 3년) 학생이 참석해 '미래 인재들이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소망을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올해가 소양강담이 지어진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수도권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며 한강의 기적이 이뤄지게 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줄잡아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소양강의 시대가 끝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왔다고 감히

선언한다"고 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교육 자치, 경찰자치, 일자리문제, 녹색경제, 남북갈등, 생명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풀어야 한다. 미래 선진 한국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해야 한다"며 "강할 '강(疆)', 하나 '원(One)' 해서 강하게 하나되는 도를 만들어내는 데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회장은 "올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이 된다. 강원도가 더 크게 도약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며 "고향발전을 위해서는 이타적인 의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보태고 지원을 아끼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날 강원공직자원팀 교례회에서는 이철규·송기현 국회의원이 국비확보 유공 감사패를,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전한영 농림부 식량정책관이 고향 강원발전 유공 감사패를,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이 연임 축하패를 각각 받았다. 이세훈

▶관련기사 2·3·23면·영상 kado.net

江原日報

2023 01 10 ()

01

국방부·산림청 합류 특별도 지원위 윤곽

**19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출범
산림·군사 규제 20조원 피해
도 요청으로 관련부처 참여 확정**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과 군사 등의 토지 이용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표적 규제 부처인 국방부와 산림청이 지원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대통령령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의 심사를 마쳤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총 1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산림청장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국방부와 산림청이 합류하고 외교부는 빠졌

다. 국방부와 산림청의 참여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도내 산림규제는 1만5,181km²로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한다. 군사규제 역시 2,914km²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산림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10조770억원, 군사규제의 경우 10조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림·군사규제 완화 없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특례조항 중 외교 부문은 없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제외됐다. 제주의 경우 각종 특례사업 중 ‘세계평화의 섬’ 조성계획이 외교 현안이라는 점에서 외교부 장관이 포함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원위 구성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일 출범 전에 국무총리는 10명 이하의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게 된다. 지원위와 실무 지원단은 가장 먼저 현재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특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율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제부터 4대 핵심 규제사항에 대한 특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도민일보

춘천 중도유적공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속도

도·시, 심의신청 등 연내 마무리
2025년 9월까지 박물관 조성 난항
국비지원 등 자금난 해결시 가시화

속보=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됐던 중도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 시한(본지 9월 22일자 1면 등)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가 춘천 하중도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돼 자금난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인 유적공원·박물관 조성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박물관 등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난 등으로 사실상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상태다.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327억4500만원으로, 문화재 발굴 및 보존조치 등을 위해 기투자된 39억원에 더해 앞으로 288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가운데 도와 춘천시가 하중도 내 문화재 발견 지역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재 지정 추진 면적은 유적박물관 및

공원 조성 구역인 청동기 환호보전구역(6만1500㎡)과 원삼국환호보전구역(3만2000㎡) 등을 포함해 총 11만2998㎡이다. 이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시 국비지원의 근거가 생긴다. 사업추진의 걸림돌인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

도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사전심의 절차를 연내 모두 마무리, 연말에는 문화재청 심의 신청을 하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최종 지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수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연내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정승환

江原日報

신복읍 숙원 '북춘천역' 재추진 주목

도, 춘천~원주 중단철도 추진에 신설 가능성 제기

【춘천】춘천시 신복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북춘천역 신설'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대신 원주~춘천 내륙중단철도의 역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신복읍 주민들이 북춘천역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해 시가 9일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 하지만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의 경우 춘천 구간 추가역사 신설 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신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원주~춘천 내륙중단철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 4월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북춘천역 신설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용역은 철도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년)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역사 신설은 국가철도공단의 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판가를 나는 만큼 지금부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 주민 등이 시설

계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를 대상으로 고속철도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축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한 북춘천역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복읍 주민들은 인접지역인 양구, 화천군과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북춘천역, 신복역 등의 추가역 신설을 건의해 왔지만 번번이 수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역을 설치해도 되지만 추가역 설치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춘천역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주~춘천 내륙중단철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북춘천역 신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지하로 계획됐던 1공구(춘천시 근화동~신복읍 산천리 구간 7.4km)에 이어 2공구(춘천시 신복읍 산천리~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구간 11.224km)의 지하화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된 '춘천~속초 철도건설 노반 실시설계(안)'를 지난 6일까지 공람·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장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삼척 근덕면 관광·휴양 복합타운 조성 본격화

시 2026년까지 2018억원 투입
이달 지역개발계획 구역 지정
내달 사업자 공모·용역 마무리



삼척시가 근덕면 원전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휴양 복합타운 조성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삼척시가 근덕면 원전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휴양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달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에 나서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근덕면 부남·동막리 일원 대진원전해제부지(172만㎡·약 52만평)을 대상으로 '삼척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구역 및 사업시행지 지정신청 등 관련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또 내달부터 민간분야 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한편,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힐링네이처랜

드) 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해당 부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등 후속절차도 매듭짓기로 했다.

삼척대진원전건설사업은 2012년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 완전 백지화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지는 1980년대부터 원전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투자 위축, 지역통합 저해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해당 지역에 에너지 자립과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휴양복합타운을 조성

키로 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공과 민자를 포함해 모두 20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관광숙박시설 등까지 포함하면 무려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휴양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전국 최초 RE100 개념이 적용되면서 풍력발전(24MW급)과 수소 연료전지(10MW급) 등 저탄소 그린 에너지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에코라이프타운으로 공급하는 등 재생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돼 주목된다. 이 곳에는 자연체험 복합테마의 에코디스커버리파크와 웰니스 치유센터, 호텔·리조트·빌리지·캠핑장 등이 조성되고 기존에 공사가 중단된 방재산업단지 일원에 팍랜드와 생태정원 등을 비롯해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구성민 koo@kado.net

강원도민일보

강릉 주문진 '제3농공단지' 필요성 제기

2농공단지 100%분양 포화상태
“교통망 연계 산업효과 극대화”
시, 단지확장 타당성 용역 진행

지난 2021년 12월 100%분양 완료된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확장 및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릉시는 기존 주문진 농공단지의 입주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 15만 7531㎡ 규모의 주문진 제2농

공단지(교항리 1265-13번지)를 조성했다.

현재 제2농공단지에는 음·식료품, 전기장비, 금속가공제조업 등 26개 업체가 들어와 100%분양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제2농공단지의 분양 완료로 기존 업체의 공장 증설과 신규업체의 공장 신설, 기업 유치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24년 강릉~부산선, 2025년 강릉~인천선, 2027년 수서~강

릉선과 동해북부선(강릉~고성제진) 철도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접근성과 기업의 경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농공단지의 확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함군호 주문진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2농공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농공단지 조성이 절실하다”며 “관광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3농공단

지가 조성되면 산업효과가 극대화돼 지역 경제 및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2농공단지인 근교항리(1190번지) 일원 2만 7950㎡를 대상으로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확장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경영난 빠진 ‘플라이강원’ 양양공항 떠나나

올해 도 지원금 대폭 삭감... ‘양양 모기지 포기’ 카드 검토
플라이강원 “코로나에 적자 심각” 도 “떠날 시 계약 위반”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유일한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양양 모(母)기지 포기’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강원도의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며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다협 의 과정에서 입장 차도 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플라이강원은 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기지 변경과 사명 변경을 안건으로 논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영진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와 경영난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모기지를 옮기고 사명에서 강원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플라이강원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의 발단은 강원도에

서 올해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항공사업 면허 취득 후 144억원가량의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도로부터 선 지급 형태로 지원받았다. 국내선 왕복 1회당 300만원, 국제선의 경우 1,00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선 지급된 지원금 중 현재 36억원이 남아 있고 이는 올 상반기 중 소진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선 지급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국내선 1회당 60만원, 국제선은 200만~6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이 당초보다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은 유일하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양

양공항을 잠시 이용하는 다른 항공사와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며 “양양에서 TCC(관광 융합 항공사) 모델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아직도 사업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마저 끊기면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플라이강원과 2027년까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유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행한다는 상호 협약을 체결한 만큼 양양공항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중 90억원 이상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 주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취항 이후 3년간은 사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대규모로 선 지급했지만 더 이상은 예전 수준의 지원은 어렵다. 플라이강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1 10 ()
/ 19

‘지방자치·교육’ 일원화 고민할 때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깊이 있는 논의 필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과도한 선거비용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제안된 상황입니다. 교육정책이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지난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1992년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타 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어 후보가 난립해 개인이 선거비용을 전부 마련해야 하는 등 선거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은,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되지 않아 지역 교육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교육행정서

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 지방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교육예산에 대한 집행권, 교육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교육자치가 강화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자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강원도 입장에서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안은 시도지사 후보만 선거를 치른 뒤, 당선자가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인사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교육감 선출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대사입니다. 러닝메이트도 이런 철학과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인 시각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고향기부제’ 복잡한 인증절차 전면 개편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복잡한 인증절차로 기부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의 기부 의사를 반감시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 등 납세자가 본인 고향이나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며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특산물로 답례하는 제도다. 기부받은 재원은 농어촌 지원, 교육,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이런 목적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간편한 인증절차는 기본이다. 그래야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 시점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향사랑기부

제의 핵심인 중장년층 이상을 배려하지 않는 데 있다. 간편인증, 거주지인증, 금융인증 등 생소한 절차가 줄줄이 이어지며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 회원가입, 본인인증 단계부터 문제다.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기부금 납부 페이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가 가능하지만 이 중 계좌이체와 카드결제의 경우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가 없으면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 사안은 행정의 기본적인 주민 편의성 및

그에 따른 무사안일에 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는 행정의 병폐를 고루 나타낸 케이스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당장만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뒤따르게 돼 있는 원론적 발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는 해명이 그것이다. “기부지에 대한 주소 제한, 금융거래 등 보안 문제로 개인정보 인증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취약층을 위해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식이

간편·거주지·금융인증 등 1시간 이상 소요

고향사랑 도입 취지·기부 의사 반감시켜

철저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을

다. 그래서야 정책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 어렵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도 힘들다. 정책과 국민과의 간격만 더 벌려 놓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와 절박성을 감안해 볼 때 준비 과정은 치밀했어야 했다.

오늘 우리의 지방은 붕괴를 넘어 소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는 날로 수도권과 광역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지방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절벽에 와 있으며 마을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고안한 것이다. 다시 철저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